

[2006년 09월 24일] 중앙선관위 9급 기출복원-(행정학:김중규)

출처 : <http://www.kaspa.co.kr/>

<출제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관위시험은 전반적으로 변별력과 참신성을 갖춘 좋은 문제들로 구성된 출제였다고 봅니다. 범위(locus)와 수준(focus) 면에서 특별히 흠잡을 데 없는 돋보이는 출제였습니다. 우선 유형에 있어서는 극히 일부 정형화된 기출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전자정부, 지식행정관리, NGO와 뉴거버넌스, 1990년대 성과관리, 자율예산편성제, 갈등관리, 정부실패 등 현대 행정학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주제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고전과 현대가 조화된 좋은 출제였습니다. 난이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깊은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 깊게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약간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9급수험생들의 실력 등을 감안할 때 변별력을 지닌 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선행행정학개론과 문풀강의를 수강하고 이를 소화한 수험생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과 충분히 점수차를 낼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모쪼록 지나간 시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다가오는 서울시 시험까지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문 1】 행정개혁이 갖는 일반적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행정개혁은 행정을 인위적·의식적·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관련자들의 저항을 수반한다.
- ②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총체적 계획하에 신속하게 수행·완료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체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성, 발전, 소멸하는 생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 ④ 행정개혁은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사회심리적 과정을 포함한다.

(답) ② 행정개혁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 환경이나 정치적 지지에 의존하며, 권력투쟁·타협·양보·다양한 전술이 행해지는 정치적 현실과 불확실 속에서 전개되므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으며 총체적 계획하에 신속하게 수행·완료될 수 없다. 또한 행정개혁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저항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다발적이고 지속적 변화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1075)

【문 2】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주인 - 대리인이론이 제시하는 대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주민소송제도
- ② 예산성과금제도
- ③ 정보공개제도
- ④ 예비타당성제도

(답) ④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국민)과 대리인(관료)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Agency Loss)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리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그리고 성과금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참여의 일종이며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과 국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④의 경우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하여

예산배분 전에 이에 대한 타당성을 기획예산처가 국가재정경제전반에 걸쳐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내부적인 재정통제수단에 해당하며 주인과 대리인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을 극복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2007선행정책개론 p.468)

【문 3】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된 최근의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되 투입요소인 예산이 아니라 산출요소인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 ② 결과중심의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은 무시한 채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쉽다.
- ③ 성과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측정 평가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④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답) ② 1990년대 다시 등장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성과를 공무원의 성과가 아닌 고객의 만족감 차원에서 재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성과의 관점이 전통적인 1950년대의 성과주의처럼 내부적인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대응성 등을 포함한 최종적인 영향(impact)까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④의 경우 최근 예산개혁의 특징은 성과목표는 통제하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재량을 허락한다는 점이다. 아래 정리자료는 2006.9 선관위대비 단기특강때 사용한 내용(1950년대 성과주의와 1990년대 성과주의의 차이)인데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정리> 1950년대 성과주의와 1990년대 성과주의의 차이

예산제도에 국한한 국정 전반에 연계(인사, 조직, 감사, 정책 등)	1950년대 성과주의	1990년대 성과주의
성과정보	투입과 산출(능률성)	산출과 결과(효과성)
성과책임	정치적, 도덕적 책임	구체적, 보상적 책임
경로가정	투입은 자동으로 성과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가정'	투입이 반드시 성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복선적 가정'
성과관점	정부(공무원) 관점	고객(만족감) 관점회계방식 불완전한 발생주의 (사실상 현금주의) 완전한 발생주의연계범위

【문 4】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의 한 형태로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활동이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정부를 말한다.

- ② 1980년대의 「행정정보화사업」을 통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이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을 통해 전자정부로 가는 질적

고도화를 시도하였다.

③ 디지털행정은 21세기 지식기반행정의 핵심 수단이다.

④ 전자정부에 의한 디지털행정은 정보공유를 통해 참여행정을 실현함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크다.

(답) ② 1980년대의 「행정정보화사업」을 통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에 이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을 통해 전자정부로 가는 질적 고도화를 시도하였다.(2007선행정학개론 p.596)

<정리> 우리나라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정

(1) 태동기(1960년대-1970년대)

① 1960년대 : 경제기획원 중심의 행정전산화 사업 시작

② 1970년대 : 과기처 중심의 행정전산화 사업 지속(과기처내에 중앙전자계산소 설치)

(2) 안정기(1980년대) : 총무처 주관기

① 1978-1986 : 제1,2차 행정전산화 사업(인사, 급여, 연금 등)

② 1987-1996 : 제1,2차 행정전산망 구축(6대 우선업무 및 11개 업무 등 '국가기간전산망사업' 본격 추진)

(3) 전자정부구축 추진기(1997-2001) : 정보화촉진기본법(1996년)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및 전자정부를 위한 10대과제 선정추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본격추진

(4) 전자정부 본격 추진기(2002-2006) :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문서감축, 정보공유, BPR 등 추진

【문 5】 지식행정관리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향상

②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

③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④ 계층제적 조직구조의 강화

(답) ④ 지식행정관리에서는 계층구조를 탈피하려는 탈관료제적 조직이 선호되며, 계층제적 조직구조의 강화는 기존의 관료제적 행정관리의 성격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604)

<정리> 기존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의 차이

구분	기존행정관리	지식행정관리
조직 구성원 능력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 공유	조직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파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 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 재산화
지식 활용	정보, 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 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 조직 기반 구축

【문 6】 파킨슨(C. Parkinson)의 법칙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①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② 파킨슨이 실제 측정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수는 매년 평균 5.75%의 비율로 증가했다.

③ 정부의 통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④ 새로운 행정수요에 상관없이 정부규모는 확장된다.

(답) ③ ① 파킨슨(C. Parkinson)의 법칙이란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② 파킨슨이 실제 측정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수는 매년 평균 5.75%의 비율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④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에 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나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정부규모와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는 이론이다. ③의 경우 파킨슨의 법칙은 정부규모의 팽창을 강조하는 이론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60)

【문 7】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향식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 ② 이 제도를 통하여 자원배분의 자율성은 제고되나 효율성은 저하된다.
- ③ 단기적 시각의 예산편성방식이 갖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 시각의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 ④ 개별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자체 예산편성을 한다.

(답) ② 자율편성예산제도의 핵심은 (1) 재정당국(기획예산처)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5개년)재원배분계획을 마련하고, (2)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하향적으로 설정해 주면(Top-down), (3) 각 부처가 그 한도내에서 개별사업별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4) 재정당국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이다. 자율편성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1003~p.1004)

【문 8】 행정통제의 실택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측정이 용이한 것에 치중한 통제는 행정목표의 왜곡을 초래한다.
- ② 과소통제와 과잉통제는 모두 행정효율을 저하시킨다.
- ③ 절차의 규칙성 확보와 부정방지에 치중한 통제는 공무원의 피동화와 업무수행의 소극화를 조장한다.
- ④ 짧은 기간 내에 집중되는 ‘강조주간적 통제운동’은 통제의 면역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답) ④ 행정통제의 실택은 행정통제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④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집중되는 일회성 ‘강조주간적 통제운동’은 ‘소나기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의 인식 확산으로 통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통제에 대한 면역증이나 불감증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 지속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는 지속성의 원칙이다. ①은 균형성의 원칙이며, ②는 적량성의 원칙으로 통제비용과 통제효과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2007선행정학개론 p.1063)

【문 9】 비정부조직(NGO)의 참여를 통한 국가개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의 등장은 NGO의 국정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 ② NGO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치행정체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 ③ NGO는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현대사회에 있어 공공부문이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④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참여는 국가권력에 대한 새로운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답) ① 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는 NGO 등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사회구성세력간 연계망(협력적 네트워크)을 구축하여 국정을 공동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모형이다. 따라서 뉴거버넌스의 등장은 NGO 등의 국정참여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② NGO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치행정체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③ NGO는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현대사회에 있어 의회나 정부가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를 보완해줌으로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④ NGO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것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참여는 국가권력에 대한 새로운 견제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103)

【문10】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② 재원조달방식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조세 이외의 보다 다양한 세입원에 의존하고 있다.

③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은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의 선호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

④ 중앙재정은 지방재정과 비교할 때 공정성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답) ③ 순수공공재(외교, 국방 등)를 공급하는 중앙정부는 티부가설 등 지역간 이동성이 없고, 국민의 선호와 관계없이 일방적 과정으로 공급하므로 주민의 선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지만, 준공공재(도로, 교량 등 SOC)를 공급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간 이동성이 높아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마음에 드는 서비스나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조세보다는 다양한 세외수입원에 의존하므로 수익자부담주의(응익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주민의 선호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①②④는 각각 반대이다.(선행정학개론 p.715, 예상문제행정학개론 p.223 1번 문제와 유사)

<정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

국가재정	지방재정
순수공공재 공급(외교, 치안, 국방, 사법 등)	준공공재의 공급(도로, 교량 등 SOC)
포괄적 기능 수행	자원배분기능 수행
응능주의	응익주의
가격원리 적용 곤란	가격원리 적용 용이
기업형 정부 적용 곤란	기업형 정부 적용 용이
전략적 정책기능	전술적 집행기능
형평성	효율성
비경쟁성	경쟁성(지방정부간)
조세에 의존	세외수입에 의존
지역간 이동성 없음	이동성 높음(티부가설)

【문11】 행정의 가외성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린드블롬(C. Lindblom)이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②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③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운영에 필수적이다.

④ 가외성은 위기관리와 관계가 멀다.

(답) ② 가외성(Redundancy)이란 여유와 중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이다. ①의 경우 가외성은 Lindblom이 아니라 M. Landau가 주창한 개념이며, ③의 경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외성을 무한정 인정하기가 힘들다. ④의 경우 가외성은 위기 또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일수록 그 효용이 증대된다.(선행정학개론 p.131)

【문12】 인간관계론의 핵심인 호손(Hawthorne)실험의 결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 집단의 단점 극복을 위하여 권위주의적 리더십 유형을 필요로 한다.

②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③ 관리자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도 갖추어야 한다.

④ 조직관리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은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답) ① 인간관계론은 호손(Hawthorne)실험을 통하여 관리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종업원의 육체적 능력이 생산량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규범(대인관계나 인간의 심리적 만족감 등 사회적·비경제적 동기)에 의해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인간을 과학적 관리론처럼 X이론에 입각하여 기계적·과학적·권위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Y이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감정적·심리적·사회적 요소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식구조보다는 비공식조직의 역할을 중시한다. ①의 경우 인간관계론은 민주적 리더십을 중시하므로 틀린 지문이다.(선행정학개론 p.168)

【문13】 예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은 관리 혹은 행정적인 도구이다. 예산은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 ② 예산은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분류된다.
- ③ 예산은 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경제적 도구이며, 예산에는 자원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들이 구현되어 있다.
- ④

(답) ②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조세수입)와 특별회계(조세외수입)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제출 및 성립시기에 따르는 분류이다. 본예산은 회계연도개시 9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하여 성립된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예산제출 후, 의결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며, 추경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편성·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선행정학개론 p.940, p.950)

【문14】 점증주의(incrementalism)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결정자가 분석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의사결정은 마치 사람이 진흙 속을 비비적거리면서 간신히 헤쳐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여 ‘muddling through mode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③ 점증주의는 조금씩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합리적 결정이론과는 무관하다.
- ④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에서 상호 이해관계의 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라고 불리기도 한다.

(답) ③ 점증주의는 현실적·실증적 모형으로 현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합리모형처럼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고 보고 조금씩 상황에 따라 적응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점증주의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 결정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Lindblom은 점증주의가 현실적, 실증적인 동시에 가장 이상적, 규범적인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④의 경우 하나의 정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의 통합·조정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합리주의는 통합·포괄적(integration-comprehensive)인데 반하여 점증주의는 이러한 통합·조정 노력 없이 산발적인 분석과 평가를 중시하므로 분산·분할(fragmentation-disjointed)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의 분산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Lindblom은 자신의 점증주의를 ‘분할적 점증주의’라고 불렀다.(2007선행정학개론 p.317)

【문15】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급제 - 폐쇄적 충원 직위분류제 - 개방적 충원
- ② 계급제 - 높은 보수 형평성 직위분류제 - 낮은 보수 형평성
- ③ 계급제 - 연공서열중심 인사관리 직위분류제 - 실적중심 인사관리
- ④ 계급제 - 종합적 시각 확보 가능 직위분류제 - 종합적 시각 확보 곤란

(답) ② 계급제는 생활급이나 연공급에 의존하므로 보수의 객관성·합리성·형평성이 결여되지만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르는 직무급을 택하게 되므로 보수의 객관성·합리성·형평성이 높다.(선행정학개론 p.811)

<정리>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구분	직 위 분 류 제	계 급 제
분류기준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 (종적분류+횡적분류)	개개인의 자격·능력·신분(횡적분류)
발달배경	산업사회	농업사회
채용국가	미국·캐나다·필리핀	영국·독일·일본
인간과 직무	직무중심	인간중심
시험·채용	합리성, 공평성	비합리성
일반·전문행정가	전문행정가 양성	일반행정가 양성
보수정책	직무급(동일직무·동일보수의 합리적 보수제도)	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인사배치	비신축성(횡적교류 곤란)	신축성(횡적이동 용이)
행정계획	단기계획·단기능력·단기안목	장기계획·장기능력·장기안목
교육훈련	전문지식 강조	일반지식·교양강조
조정·협조	곤란(할거주의 초래 우려)	원활
개방형·폐쇄형	개방형(외부채용형)	폐쇄형(내부충원형)
신분보장	약함	강함
직업공무원제	확립 곤란	확립 용이
조직구조와의 관계	연계성 높음	연계성 부족
인사운용의 탄력성	낮음	높음
공직의 경직성	낮음	높음
창의력 계발 및 능력발전	불리	유리

【문16】 정책평가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책평가는 정책결과에 대한 정보를 환류시켜 효과적인 정책집행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주지만, 정책 중단이나 축소 여부의 결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 ②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전략의 수립은 주로 총괄평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하여 가능하다.
- ③ 정책과정상의 정치적 책임은 정치체제의 담당자가 국민들에게 지는 책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지게 된다.
- ④

(답) ③ ①의 경우 정책평가는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여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수정 또는 종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환류의 기준을 제시하여 준다. ②는 총괄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 내지는 과정평가이며, ④의 경우 정책평가는 정책수단과 결과관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사회과학의 이론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책과정 중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정책의 효과를 규명하는 정책평가가 가장 이론적 과학성이 높은 영역이다. ③의 경우 정책과정상의 정치적 책임이란 관리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에 대비되는 말로 정치체제의 담당자가 국민들에게 지는 책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지게 된다.(선행정학개론 p.387)

【문17】 흑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 항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

②

③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현재의 특수사정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④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답) ④ ④는 정책종결이 아니라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정책승계란 기본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정정길외 정책학원론 p.836, 선행정책개론 p.404)

【문18】 선거직의 짧은 임기와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정책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 ①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
- ② 비용과 편익의 절연
- ③ 독점생산
- ④ 높은 시간할인율

(답) ④ 정치인들의 짧은 임기와 관료들의 짧은 순환보직기간(1-2년)으로 인하여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멀리 있는 미래의 장기적인 이익과 손해를 낮게 평가하고 눈앞의 단기적 이익과 손해를 높게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시간할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할인율이 높고 할인기간이 길수록 장래 이익의 현재가치는 작아지게 되므로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재임기간중에 이득을 실현하려는 욕심이 앞서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득에만 집착하는 행태를 가지게 되고 이로써 정책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①의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이란 정치인들이나 관료가 문제의 해악만을 강조하고 문제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보상 때문에 무책임하게 정부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짧은 재임기간과는 거리가 멀다.(2007 선행정책개론 p.80)

【문19】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방형직위제를 통해 국·과장급 직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 ②
- ③ 수직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 ④ 갈등이 심한 경우 조직은 침체되어 있어서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어려워 조직성도가 낮을 수 있다.

(답) ① 개방형직위제를 통해 국·과장급 직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공직내 적당한 갈등을 조장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2007 선행정책개론 p.556, 갈등조장론) ② 통합형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이란 자원이 유한하지 않아 갈등당사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갈등관리전략으로서 Thomas가 말하는 협력전략(collaboration)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에서는 치열한 제로섬(zero-sum)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갈등을 통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은 수직적 갈등이 아니라 수평적 갈등이다.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의 경우 갈등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 갈등이 너무 없는 경우 조직은 침체되어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느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어려워 조직성과가 낮을 수 있다.(2007 선행정학개론 p.555-556)

【문20】 행정조직의 관료제적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정부의 도입은 관료제의 번문옥례(red tape)를 시정할 수 있다.
- ② 승진, 조직 확대를 통한 관료제의 이익추구는 수단을 목적화한다.
- ③ 지나친 전문화는 좁은 시야와 포괄적 통제력의 부족을 야기한다.
- ④ 관료제는 현상유지에 집착하여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답) ④ 관료제는 현상유지에 집착하여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동에 저항하는 이른바 교착상태(경직성)를 띠게 되는 병리현상이 있다. ① 전자정부의 도입은 업무처리재설계(PAPR)나 리엔지니어링(RE) 등을 통하여 번거로운 절차나 문서를 감축시켜 주는 관료제의 번문옥례(red tape)를 시정할 수 있다. ②의 경우 Peter의 원리와 관계되는 병리현상으로 관료들이 지나친 승진, 조직 확대를 통한 관료제의 자기이익 추구는 수단을 목적화하여 동조과잉이나 목표의 전환을 초래한다. ③의 경우 관료들의 지나친 전문화는 좁은 시야에 의한 전문적 무능과 포괄적 통제력의 부족을 야기한다.(2007 선행정학개론 p.490)